기술민주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글 | 손화철 _ 부산대 박사후과정 whachuls@hotmail.com

지난 글에서는 소위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의 현대기술에 대한 비관주의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했다. 그 중 하나가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위너와 핀버그 등의 제안이었는데, 현대기술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주제다.

시민패널의 결정 '합의회의'

기술의 민주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합의회의라는 제도를 살펴보자. 합의회의는 논란이 되는 과학기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시민 패널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방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번 시행되었다. 그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나 시민단체 등 합의회의를 주관할 단체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시민패널을 모집한다. 예를 들어 핵 발전 지속 여부에 대한 합의회의 개최 공고가 나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시민들이 응모를 하고,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패널을 뽑는다. 시민 패널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 평균적인 시민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패널 선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먼저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뒤에 2~3일 정도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기도 하면서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사항을 언론에 공개한다. 합의회의의 결정은 그 자체로 어떤 구속성을 지니지 않지만 평균적인 시민들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나 다른 시민들이 무시하기는 어렵다.

합의회의 외에도 시민들이 기술발전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 시민배심원 제도, 공청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기술의 민주화에 대한 오해

민주화는 일반적으로 독재자나 왕에게 집중된 정치권력을 시민에게로 돌리는 것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적 절차는 투표를 통해 한정된 기간 동안의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기술의 민주화 역시 이런 식으로 보자면 과학기술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술발전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돌리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해석은 많은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

우선 기술의 민주화는 전문가 집단의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사실 고전적 기술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대기술의 복잡한 발전 양상은 시민들뿐 아니라 과학기술인들도 제대로 통제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기술이 한 데 얽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기술개발의 목적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인들도 거대한 흐름에 쓸려갈 뿐 그 방향성에 대해 판단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술의 민주화는 이 거대한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들과 시민의 연합 작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의 민주화가 과학기술인의 판단력을 의심하거나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오히려 과학기술인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합의회의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비전문가로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민의 개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와 개발이 방해를 받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부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으며, 개발할 기술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더 길어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과학기술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술발전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

기술의 민주화는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부추기는 시도도 아니다.

과학과 기술의 영역은 오랫동안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개입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술 민주화 주장은 철저하게 실용적이다. 기술발전에 있어 어떤 방향이 옳으냐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회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문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기술 민주화 주장의 한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 민주화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 모든 것을 공학자와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전문가가 제공하는 대로 만족하고 살라는 식의 논변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합의회의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여러 번의 공청회와 세미나가 개최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것 자체가 기술 민주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민주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민주화 주장은 그 나름의 현실적, 이론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실현가능성의 문제다. 기술의 민주화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치열한 시장경쟁의 논리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당장 합의회의만 보더라도 그 구성과 진행을 누가 맡을 것인가, 그 결과의 중립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시민 패널이 내린 결론을 정부나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기술은 국경을 모르는 반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일정한 경계와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선거를 할 때 누구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유는,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민주적인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경계를 모르는 기술에 경계가 필수적인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특정 연구(예를 들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하고 B나라에서는 허용했다고 하자. 나중에 B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 A나라에서 유통될 수도 있고, 아예 A나라 국민들이 B나라를 방문할 수도 있다. 개발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국은 윤리적인 우려를 무릅쓰고 경쟁과 선점의 논리에 의해 기술개발에 매달리게 된다.

또 한 지역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결정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11월 한국 최초의 중 ·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결정된 경주의 예가 대표적이다.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인센티브로 주어지게 되자 유치 경쟁이 벌어져 최종 후보지로 경주와 군산이 선정되었다. 최종선정은 주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치 지역 주민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반수이상이 찬성하는 지역들 중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투표 결과 투표자의 89.5%가 찬성한 경북 경주시가 투표자의 80.1%가 찬성한 전북 군산을 물리치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확정되었다. 정부와 대다수의 언론은 국책사업을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겼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경주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울산시가 이의를 제기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곳이 경주시와 울산시의 경계와 매우 가까워서 폐기물 처리장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경주시민보다 더 가까운 울산시민도 많다는 것이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대신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폐기물 유출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울산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멀리 사는 경주시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민주적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설사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한다 해도, 얼마만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거리별로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기술의 민주화, 좋은 것이고 추구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S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